

농업분야 창업 현황과 지원정책

추정완*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석사

허철무**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국 문 요 약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증가추세인 반면 농촌과 농업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구조도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어 농업경영과 농촌사회의 지속성이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귀농·귀촌을 권장하고 농업분야의 창업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수혜자들에게 노출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지원체계가 혼란스러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에서의 창업현황을 살펴보고 농업벤처 창업과 6차산업 창업으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중심이 되는 '6차산업 창업지원 체계화 방안' 과 '6차산업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그리고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대책' 을 중심으로 농업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와 각 기관에서 시행중인 정책들을 살펴보고, 경영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창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과 보완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대부분의 정책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창업관련 정책은 농촌진흥청에서 기획을 하면서 '농식품 가공' 중심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상대적으로 홍보나 판촉 및 유통, 농촌관광 등 서비스업 분야의 지원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경영체별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부터 경영체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론 교육보다는 실제 창업준비를 위한 상담이나 멘토링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각 시행 기관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각 지자체 중심의 단일화된 지원 창구가 되어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서론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증가추세이나 농촌과 농업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우리 농촌인구의 구조는 65세 이상의 농업경영주 비율이 55.7%를 차지하여 고령화도 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40대 미만의 경영주는 0.9%를 차지하여 농업경영과 농촌사회의 지속성이 크게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 귀농·귀촌을 권장하며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농촌에 대한 관심과 귀농·귀촌을 고려하고 있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 농촌 인구가 증가세로 반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촌의 창업에서도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촌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창업지원을 위해 '6차산업 창업지원 체계화 방안'과

'6차산업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의 시행으로 많은 농업법인들이 창업을 하였으며,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대책'을 수립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벤처농업의 육성을 꾀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청년인재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영농창업 지원사업'을 계획하여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창업지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보다는 경영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들이 많고,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이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관련 정책의 홍보도 부족하여 실제 귀농을 하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에서의 창업현황을 살펴보고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효과

* forces73@naver.com

** telekan@naver.com

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분야의 벤처창업지원 제도와 6차산업과 연계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실제 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을 찾아내고자 한다.

II. 연구 배경

2.1. 귀농·귀촌

최근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65세이상의 농업경영주 비율이 55.7%에 이르고, 40세 미만의 경영주 비율은 0.9%뿐이 안되는 등 인구 구조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이에 농촌사회의 지속성과 농업경영면에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귀농자의 유형이나 귀농배경을 고려하고 귀농 이후의 경제활동이나 문제점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귀농준비자나 희망자가 귀농을 결정할 때 어려움을 느낀 사항들은 귀농자금(41.9%), 농작물 재배나 경영 등의 기술문제(21.3%), 노동력 확보(5.8%), 생산물 판로(5.8%)등의 순서이다(강대구, 2009). 이를 고려한다면 지원정책은 초기에는 자금이나 기술지원을, 정착이후에는 유통 및 판로 지원이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2.2. 농업분야 창업

농업분야의 창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단순히 귀농·귀촌 이후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관련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거나 혹은 인증받지 못했더라도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품생산을 하기 위한 농업관련 기업의 창업이다.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나뉘지며 농업생산, 가공, 유통, 농업서비스업의 유형의 창업이 이뤄진다. 벤처농업은 농업생산, 유통, 가공, 농기계와 농용 자재류, 유전자 조작에 의한 유전자원 생산, 농업 및 농촌지역개발 관련 정보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분야의 사업을 포괄하는 기업군과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기술개발을 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경우이다(벤처농업 경영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05).

농업분야의 창업지원 정책은 이러한 창업유형과 법인의 유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특히 창업에 있어 나타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III. 창업 현황과 지원 정책

3.1. 창업 현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다. ‘농업분야 창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정의에 의한다면 중소기업인 농업벤처기업이나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5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6차산업 관련 창업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6차산업 관련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농식품벤처와 6차산업창업의 차별성은 농식품벤처는 기존 농식품산업의 문제점 개선과 신가치창출을 추구하고, 6차산업은 지역단위 활성화와 지역사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한다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농업분야의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영세한 편이며 벤처기업의 창업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농업분야의 창업건수는 2012년 144건, 2013년 108건, 2014년 63건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중소기업청, 2015). 이는 산업의 특성상 지원의 한계가 있으며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중소도시나 읍·면 등 농촌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다른 업종의 벤처기업보다 소외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한국노동연구원, 2015). 농식품 분야 창업은 크게 ICT, BT 등 첨단 기술을 농업분야에 접목하는 신기술 벤처창업과 농업 생산물의 가공기술 등을 활용한 농촌 현장형 창업으로 나눌 수 있다. 업종별로는 6차 산업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ICT·BT 융합기술, 제조, 서비스, 에너지,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 기자재, 종자, 관광 상품, 신소재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5).

농업법인의 설립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의 시행과 6차산업관련 정책의 시행으로 2010년 이후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감소하였다.

<표 1 > 농업법인 창업현황

단위 : 개

구분	2014	2015	2016
농업생산	338	1,556	529
가공업	392	102	57
유통업	445	412	164
농업서비스업	193	0	79
기타	344	382	0

자료 :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2018), ‘농업법인조사’

연차별 생멸통계는 2014년 창업경영체가 95.4%, 2015년 창업경영체가 89.8%의 생존율을 나타내었으며,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기업은 연수가 늘어날수록 생존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다르게 연수가 늘어날수록 생존율이 꾸준하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성장기간이 일반 기업보다 더디게 성장하면서 시간이 경과될수록 안정화가 되는 농업만의 독특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예측된다(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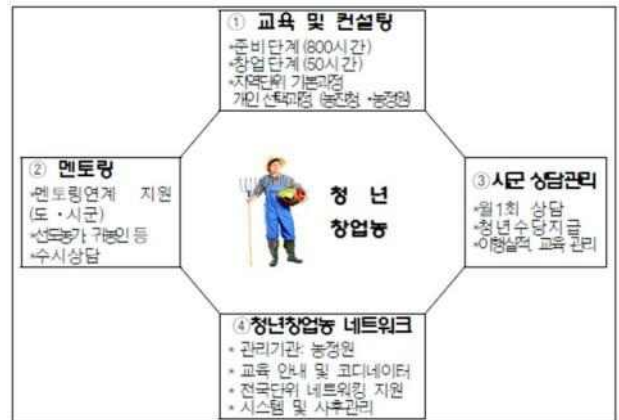
3.2. 지원 정책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산업 창업관련 정책은 2015년 수립된 ‘6차산업 창업지원 체계화 방안’과 ‘6차산업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에 의해 시행하고 있다. 우선 ‘6차산업 창업지원 체계화 방안’에서는 ‘가공’을 창업의 핵심 기능으로 설정하고, 지역 단위의 공동 가공시설인 ‘농산물 가공센터’가 중심이 되는 창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여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44개소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간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6차산업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에서는 경영체를 창업보육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졸업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컨설팅, 시설 및 자금운영, 유통 및 판로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 벤처창업관련 정책은 2015년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대책’을 통해 창업 규제를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젊은 인력의 농촌 유입으로 6차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농산업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특화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현재 서울을 비롯해 5개 지역에 설치하였으며 올해부터 ‘A+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 개발 및 연구 생태계 조성, 창의성 중심의 투자 제도 개선, 창업 규제개선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창업 붐 조성 등 총 5가지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산업 분야에 우수 청년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영농창업 지원사업’을 계획하여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K-Start up을 기반으로 총 8개 분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원정책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주관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림 1> 청년 영농창업 지원사업 체계도

농업분야로서 창업준비단계의 지원정책은 주로 이론교육에 치우쳐 있으며 실제 창업준비를 위한 상담이나 사업기획, 비즈니스모델의 점검등에 대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표 2>와 같다.

<표 2> 창업준비단계 지원정책

창업교육	농식품 창업교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창업실무교육 (한국농수산대학) 실습 중심 농대 창업과정 지원 (농식품부) 농식품벤처창업과정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창조농고, 영농창업특성화대학지원 (농식품부)
시설공간	‘Flower Truck’ 청년 창업가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청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사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멘토링, 컨설팅	실전 창업취업 스킴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농식품부) 화훼분야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화	농업인/농산업체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정책자금	농식품(모태)펀드 (농식품부)

창업실행단계의 지원은 시설공간과 정책자금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업기획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상담 및 멘토링분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표 3> 창업실행단계 지원정책

창업교육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특화센터 (농식품부)
시설공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정래 직거래장터 설립 지원 (한국농산물유통공사)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농업기술센터) 농지 지원 (농어촌공사) 맞춤형 농지 임대 (농식품부)
멘토링, 컨설팅	농산업 BT분야 창업 및 사업화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현장 창업육성 (농식품부)
사업화	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농업기술센터)
정책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식품부)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청년인력 창업인정자금 (농식품부)
R&D	농식품벤처창업 R&D 바우처 사업 (농식품부)
판로, 해외진출	벤처기업제품관(A-startup 마켓) 및 공영홍소핑 입점 지원 (농식품부)

창업성장기단계에서는 멘토링분야가 다양해지고 정책자금과 유통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멘토링분야는 창업준비단계에서 이뤄졌을 때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 > 창업성장기단계 지원정책

창업교육	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멘토링, 컨설팅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컨설팅 비용지원 (농식품부)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 (농식품부) 6차산업화 현장코칭 (농식품부) 식품-외식기업 상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술지원 사업 (한국식품기술사협회)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컨설팅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 창업, 경영개선 컨설팅 (한국농수산 식품 유통공사) 특허 전문가 현장 방문 지원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정책자금	농식품 모태펀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식품 기능성평가 지원사업 (한국식품연구원) HACCU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시설 및 운영자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시설현대화자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안전관리인증제 지원사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외식업체 육성자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수농식품 구매지원 자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기 가공식품 인증 활성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판로, 해외진출	농산업체 판로지원 <A-start up마켓 입점 지원>(농식품부) 개별 브랜드 지원사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글로벌 K-FOOD 해외현지수출상담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기술제품의 해외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수출보험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상품화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외판촉행사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판로개척마케팅 지원사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온라인마케팅지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귀농·귀촌 및 농촌지역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기관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 서로 연계가 부족하고 그 기능 또한 부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농식품 가공 중심의 창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촌 관광, 농업서비스업 분야로 창업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 정책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보다 더 실질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기관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축산식품부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며 창업 단계별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주)이암허브(2017). 일자리 창출수단으로서의 농식품 분야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농림축산식품부 연구보고서
(사)농식품산업유통연구원(2016). 6차산업 창업 현황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2016). 청년 농산업창업지원 사업계획(안)
(사)환경농업연구원(2015).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등 창출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2015).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대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2015).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대책
강대구(2009). 귀농·귀촌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농촌지도학회 한국벤처농업포럼(2005). 벤처농업 경영모델 개발 및 활성화방안 연구, 농촌진흥청 연구보고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8). www.6차산업.com
농림축산식품부 CMS(2018). www.mafra.go.kr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실제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바, 농업 분야의 창업과 관련하여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6차산업 창업지원 체계화 방안’과 ‘6차산업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그리고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 대책’의 주요 지원 정책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도시지역의 일자리 감소로